

자동차·법률 서비스 '맑음' ... 문화산업·제약은 '흐림'

■ 산업 분야별 손익 계산

한미 FTA 체결로 한국산업은 미국시장을 얻게 되는 대신 국내시장을 내줘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생존경쟁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파고를 넘어야 한다. 미국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시장에서 미국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분야는 더 강해질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 각 산업별 영향을 점검해본다.

3천cc이하 중 소형 차 수출 경쟁력



한·미 FTA는 자동차 산업의 수출 내수 시장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 인하 등 세계개편의 효과로 침체에 허덕어 온 내수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3천cc이하 중 소형 차량의 대미수출 관세 철폐로 인해 대당 200~300달러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도 5% 이상 싸게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세계 개편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차 구입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FTA발효까지 내수가 얼어붙을 수 있고 미국내 일제 차량의 우회 수출, 업체간 경쟁

가속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들은 3년 뒤 자동차와 관련한 세계개편이 "국내 자동차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현대차는 그랜저Q270럭서리 모델의 경우 특소세가 5%로 단일화되면 판매가격은 2천971만원에서 2천800만원으로 171만원(5.8%)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계개편 효과는 자동차업체에 치열한 생존경쟁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은 3천cc미만 중 소형차의 대미 수출관세 (2.5%)가 당장 철폐될 경우 대당 200~300달러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 FTA 타결로 미국의 2.5%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미 자동차 수출물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목포 신외항에 선적대기중인 자동차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화 콘텐츠, 최강 미국과 힘겨운 대결



문화산업분야는 시장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9%를 차지하는 초강국 미국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작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돼 미국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의 부담이 더 컸다. 더구나 온라인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 이용자들의 편의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스크린쿼터는 향후 추가 규제를 하지 않는 '현재유보'로 결정돼 지난해 7월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 수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졌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인 투자

제한도 사실상 폐지돼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은 미국에 완전 개방됐다. 이렇듯 문화산업분야는 주고받기 식보다 미국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지금보다 크게 됐다. 미국 측에 줘야 할 것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우리가 얻을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 조창희 문화산업국장장은 2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여서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다만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을 보장하는 등 여의 규정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살려나갈 수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 금융기법 도입·시스템 선진화 계기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돼 추가로 문을 열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측도 예외 우려와 달리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금융권은 이번 협상이 장기적으로는 선진 금융기법을 습득하고 금융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방 초기에는 국경 간 거래를 통한 자본 이동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신용등급 상승 시장을 미국 금융기관이 선점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영업 점포를 두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 간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증권연구원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485억~7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계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 개인 정보와 기업들의 대출 명세 등 각종 경영 정보가 미 금융회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국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신 금융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인가와 관련된 국내법·규제 체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국내 교육시스템 혼란 우려는 없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교육시장은 앞으로 성인 원격교육 및 테스트(testing) 서비스 분야에서 부분적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은 교육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유보하며 성인 대상 원격교육과 테스트 서비스의 경우 국내 교육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의 공공성, 민감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큰 틀에서는 문호를 열지 않았으나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일반 학위 관련 원격화학 등은 개방하기로 했다. 기타 교육 범주에 해당하는 테스트 서비스도 해외유학 등의 목적에 한해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등 미국 테스트 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한걸음 쉬어졌지만 국내 교육정책에 혼란이 우려될 경우 규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부분적 변화가 있었지만 당장 국내 전체 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WTO(세계무역기구)에 FTA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양허안을 제출할 당시 초·중등교육은 미양허함으로써 개방하지 않고 고등·성인교육 시장만 협상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 지금까지 고수해왔다.

통신시장 방어 실리 챙겨 '절반의 성공'



한미 FTA 협상에서 IT 분야는 미국측은 명분, 우리측은 시장 방어라는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무엇보다도 쟁점이었던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한도를 종전대로 49%로 묶어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장치를 유지하면서 '공익성 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간접투자는 허용, 투자활성화라는 시장 기능의 유연성을 높였다. 다만 소프트웨어(SW) 분야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범위가 확대되고 저작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미국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수용돼 향후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업체들의 서비스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신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한도를 현행 49%에서 51%로 확대하거나 이에 이를 폐지할 것이냐는 문제였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이 목적이 아닌 단순한 투자를 할 경우 이를 최대한 허용했다. 즉 최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15%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하려 할 때 공익성 심사를 받으면 49%를 넘어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익성심사 제도는 경영권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를 정부가 심사해서 경영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단순 투자 목적 이외의 경영권 인수는 제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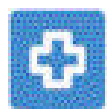
변호사 시장 단계적 개방에 일단 '안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주요 쟁점이었던 법률(변호사)시장 개방 부분은 '단계적 개방'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됐다. 법무부는 2일 "국내 법률시장은 FTA 발효 후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개방하는 방안이 최종 합의됐다"고 밝혔다. '단계별 개방'은 우리 정부와 변호사 업계가 적극 희망하던 사항으로 정부는 "여론을 반영해 단계별 개방 원칙 고수라는 최선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작되는 1단계 개방 시기에는 미국 변호사에게 미국법과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 자문이 허용된다. 또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

사무소) 설립도 가능하다. 협정 발효 후 2년 내로 잡힌 2단계 개방 때에는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와 국내 로펌간 업무 제휴를 허용한다. 업무 제휴를 하면 미국 로펌과 우리 로펌은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자문사무가 섞인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해 처리하고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 협정 발효 후 5년 내 시행기로 약속한 3단계 개방 시기에는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동업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업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동업 사업체 내 미국 로펌의 경영 지분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미국 로펌의 인수합병(M&A)으로 국내 로펌 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국적 제약사 지적재산권 과도 보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제약업계는 2일 미국 측의 요구대로 다국적 제약사의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주는 쪽으로 협상 결과가 나왔다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외교교통상부 등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권장하는 수준에서 미 측의 특허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무리한 주장은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결국 물거품이 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업계는 특히 의약품 허가·특허 연장과 자료독점권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과 개량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당했으며, 설 땅이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업체가 이제 연구개발을 통해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로 겨우 도약했으나 이번 한미FTA 협상이란 제약업계에는 2일 미국 측의 요구대로 다국적 제약사의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주는 쪽으로 협상 결과가 나왔다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향후 5년 간 연구개발비 10% 수준으로 끌어올려 신약 선진국 문턱까지 갈 수 있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났다"며 "이번 협상 체결로 건강보험 제정은 심하게 압박을 받게 되고, 국내 제약기업은 시장 점유율과 함께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이 이제 국제화, 세계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성장상을 위한 토양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트라, 대미 수출 유망 18개 품목 선정

섬유·의류·자동차 부품 '수혜'

코트라(KOTRA)는 미국 현지 바이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대미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유망품목 18개를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소재 8개 코트라 무역관이 접촉한 품목별 전문 바이어들은 10%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많은 섬유·의류 제품이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산업용 장갑의 경우 현재 멕시코산이나 중국산에 비해 10~12% 비싼 편으로 품질 우수에도 불구하고 수출증대에 한

계를 겪고 있으나 FTA 타결로 13.2%의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돼 당분간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관세가 2.5% 내외로 가격인하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미국 자동차 빅 3사 및 대형부품업체들의 해외아웃소싱 확대경향과 맞물려 수출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거나 관세율이 낮은 기계류나 전기전자제품류의 경우 관세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나 공작기계, 디지털 TV 등은 국가이미지 제고나 통관 간소화에 따른 비

■ 코트라 선정 대미 수출 18개 유망품목

산업	유망품목	선정사유
섬유·의류·신발	비직물성 헬라퀀트방직사	연평균 50% 수출증가
	산업용 장갑	고관세(13.2%) 철폐
	스타킹, 양말류	매년 지속적인 수출증가
	메리이스 편직물	가격경쟁력 중국산제거
	두꺼운 폴리우레탄 신발류	중국산 제거
자동차·부품	자동차 부품 및 승용차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폴리프로필렌 벨트	관세철폐 소(자)민간센터비
석유화학	폴리프로필렌	6.5% 관세 철폐
	ABS	ABS 활용범위 확대
철강	탄소강 바이트 용접용 연결구	수출증대 효과
	자동차용 타이머	일본산보다 가격우위
고무 및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백	중국산보다 비교우위
	PET 필름	가격 경쟁력 확보
기계	공작기계	수입증가를 32.4%
	볼 베어링	관세9% 철폐
전기전자	디지털 TV	교체 및 신규 수요 증가
	셋톱 박스	미국 진출 전면 디지털화

용 절감 등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간접 효과가 기대된다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증시, 장·단기 모두 '긍정적'

증권업계 전망

한미 FTA의 타결은 장기적으로 증시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미국이라는 넓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경기가 선순환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미 FTA는 단기적으로 관세가 높은 품목의 수출입 비중이 큰 음식료, 섬유, 자동차, 정보기술(IT), 철강 등의 업종에는 유리하겠지만 의약품 특허 강화로 제약업종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유와 유통, 은행 등도 관세율이 낮거나 시장이 이미 개방되거나 다름 없어 FTA의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한미 FTA는 우선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국에 비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대미 수출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업의 개방은 양국의 무형자산인 서비스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져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섬유는 미국 관세율이 제품별로 9~18%로 높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 제품들과 가격 경쟁에서 종전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료 업종은 FTA타결로 20~50%인 국내 수입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원재료 비용이

줄어 마진폭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IT는 대표적인 수출업종이지만 휴대전화기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반도체와 LCD도 관세부담이 미미해 FTA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디지털TV 등 프리미엄 가전은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자동차 역시 승용차의 관세율이 2.7%로 높지 않지만 일정 부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약업종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강화돼 개량신약의 출시가 어려워지고 소송이 빈발해지는 등 직접적인 충격이 예상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